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불평등 요인 분석_CRS Report

2013.03.04 | 여경훈 | noreco@naver.com

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
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새사연 추천보고서는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Thomas L. Hungerford, 2013,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Among U.S. Tax Filers Between 1991 and 2006: The Role of Wages, Capital Income, and Taxes", CRS Report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

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Sequester(재정지출 자동 삭감)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1년 8월 국가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할 때, 공화당 주도 하에 10년 동안 1.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감축하는 법안(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통과시켰다. 원래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되어 1090억 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연말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3월로 연기되고 850억 달러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일부 감세조치가 환원되는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은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 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출 자동감축이 시행될 경우 GDP는 0.6%p 떨어지고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은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사회보장 감축 축소와 추가적인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자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국방비 감축 규모는 줄이되 사회보장 감축 규모는 더 늘려서 재정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혀 상반된 해법만 고수하면서, 협상이 타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시퀘스터 공방에는 사회보장 축소, 부자 증세 등 첨예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포함되어 있기에 정치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런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는 와중에, 소득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국 의회연구서비스(Congress Research Service)의 Thomas Hungerford가 소득불평등의 요인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했는데,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상관없이, 지난 15년간 소득불평등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분포의 변화다.”

이는 재정문제를 ‘버핏물’로 대변되는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하자는 오바마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다. 소득불평등을 분석하는 다른 여타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다. 결론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1776년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을 작성한 이래 거의 200년 동안, 1909년 이탈리아 사회학자 Gini가 지니계수를 고안한 이래 거의 100년 동안, 소득 분포 또는 불평등에 관해서 수많은 정치적, 학술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좌파들은 소득불평등 확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빈익 빈 부익부”를 초래한다는 고전적이 지적이 대표적이다. 즉 소득이 한쪽으로 쏠리면, 빈곤이 늘어나고 경제적 복지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므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면 수많은 사회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건강이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한다는 2차적 영향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파들은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지는 않는다고, 불평등 확대가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즉 경제성장으로 평균소득은 늘어나고 있기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인센티브로 소득불평등이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3.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결론

Table 2: Trends in the S-Gini, 1991-2006

	Gini ($\nu = 2.0$)	S-Gini ($\nu = 1.5$)	S-Gini ($\nu = 4.0$)
1991	0.468	0.330	0.705
1996	0.480	0.348	0.688
2001	0.503	0.366	0.730
2006	0.539	0.406	0.742

1991~2006년 기간 미국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15%(0.071p) 증가하였다. 위의 표에서 S-Gini는 계층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것이다. ν 가 2보다 작은 경우(고소득계층에 가중치를 더 준 경우) 지니계수는 23% 증가하였다. 반면 마지막 열은 저소득계층에 가중치를 더 주었을 경우, 지니계수는 5.2% 증가하였다. 이는 고소득계층에서 소득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는 통상의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아래 [Table 3]은 세후소득에서 다양한 소득 원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 1991년 92%에서 2006년 77%로 감소하였다. 경기침체 기간에 늘어나고 확장 기간에 줄어든 것으로 보아, 임금비중은 경기 역행적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라는 통상적인 결과와 부합한다.

반면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1991년 5.4%에서 2006년 15.6%로 287% 증가하였다. 확장기 동안 늘어나고 침체기 동안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 순응적 패턴 또한 기존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Table 3: Income Shares, 1991, 1996, 2001, and 2006

	1991	1996	2001	2006
Wages	92.32	88.77	90.18	77.11
Interest Income	9.34	5.99	5.26	4.21
Capital gains/dividends	5.42	11.26	7.65	15.57
Business Income	1.96	3.39	3.82	5.20
Social Insurance	4.93	4.25	4.71	5.58
Retirement	9.47	10.84	12.95	13.31
Other Income	4.94	5.08	5.03	4.51
Federal Taxes	-28.38	-29.58	-29.59	-25.49
Individual Income Taxes	-14.70	-16.10	-16.25	-13.22
Corporate Income Taxes	-1.13	-1.59	-1.39	-2.08
Payroll Taxes	-12.55	-11.89	-11.94	-10.2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세금은 1991년 -28.3%에서 2006년 -25.4%로 절대치로 보면 감소하였다. 1996년 절대치의 증가는 클린턴 행정부의 1993년 부자증세 조치, 2006년 감소는 부시 행정부의 2001, 2003년 부자감세 조치에서 기인한다.

Table 4: Contributions to Gini Coefficient ($\nu = 2.0$) by Income Source

	1991		1996		2001		2006	
	Share of Income Inequality	Marginal Effect on Gini	Share of Income Inequality	Marginal Effect on Gini	Share of Income Inequality	Marginal Effect on Gini	Share of Income Inequality	Marginal Effect on Gini
Wages	0.774	-0.149	0.751	-0.137	0.747	-0.154	0.600	-0.172
Interest Income	0.118	0.025	0.081	0.022	0.065	0.013	0.059	0.016
Capital gains/dividends	0.146	0.092	0.211	0.098	0.188	0.111	0.280	0.124
Business Income	0.062	0.042	0.080	0.046	0.090	0.052	0.105	0.053
Social Insurance	0.039	-0.011	0.041	-0.001	0.041	-0.006	0.037	-0.019
Retirement	0.111	0.017	0.133	0.024	0.157	0.028	0.167	0.034
Other Income	0.078	0.028	0.073	0.022	0.067	0.016	0.058	0.013
Federal Taxes	-0.328	-0.044	-0.370	-0.074	-0.355	-0.059	-0.305	-0.050
Individual Income Taxes	-0.212	-0.065	-0.251	-0.090	-0.244	-0.081	-0.200	-0.067
Corporate Income Taxes	-0.018	-0.007	-0.027	-0.011	-0.022	-0.008	-0.034	-0.014
Payroll Taxes	-0.098	0.028	-0.091	0.028	-0.089	0.030	-0.071	0.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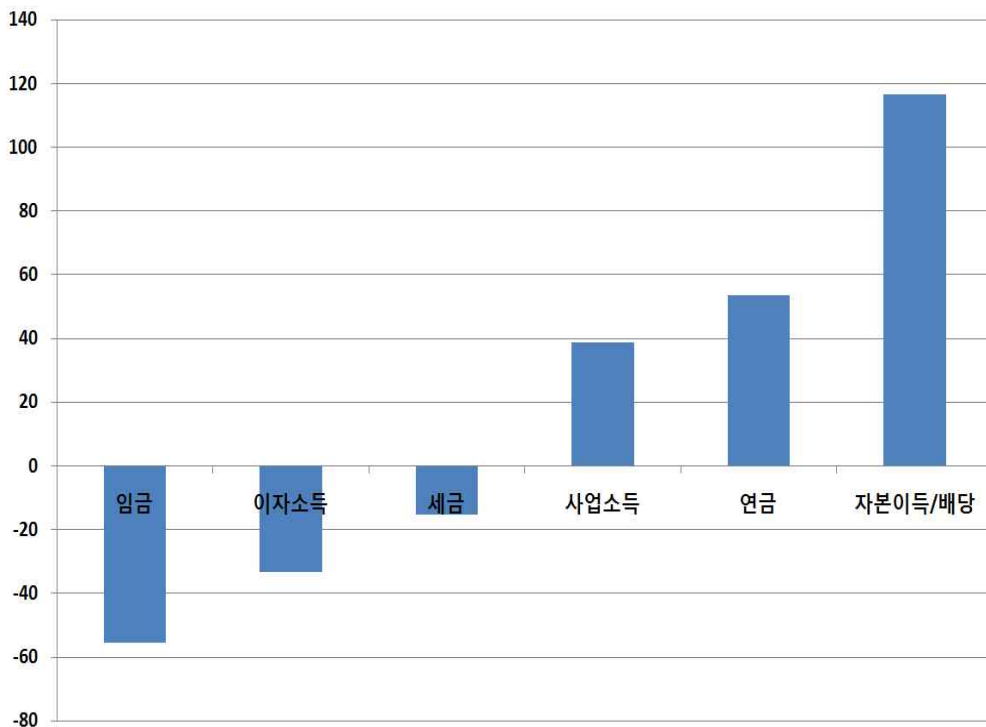
위의 [Table 4]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 원천의 기여도를 분해한 것이다. 일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반적으로 임금소득 비중과 세금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은 완화된다. 반면 자본소득의 증가는 불평등을 확대한다. 위의 표는 통상적인 이론적 분석과 일치한다. 임금소득이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15%(1996년), 0.17%(2006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이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04%(1996년), 0.05%(2006년) 감소하였다. 특히 소득세 증가는 양극화를 완화시키지만, 사회보장세 증가는 양극화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적인데 비해, 사회보장세는 비례세이고 상한선이 존재하여 역진적이라는 세제 특성과 부합한다. 반면, 자본이득이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09%(1996년), 0.12%(2006년)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1]은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인 보고서 원문의 [표7]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 것이다.

[그림1] 소득 원천별 지니계수 변화 기여도(%)



1991~2006년 기간, 지니계수는 15%(0.07p) 증가했는데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분포의 변화는 지니계수를 0.083p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분포의 변화가 전체 지니계수 증가의 결정적 역할(116.5%)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의 소득은 원래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1991년보다 2006년에 분포가 상위1%에 더욱 편향되었기 때문이다.

4. 부자증세, 자본이득 및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국내 데이터를 통해 양극화 확대를 소득 원천별로 분해한 연구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위1% 소득 비중의 확대, 지속적인 감세 정책, 경제의 금융화 현상 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진 한국경제의 특징들이다. 만약 국세청 개인별 과세 데이터가 미국처럼 공개되어 한국경제를 분석하면, 이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결과가 경제정책에 던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계의 노동소득을 강화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보편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보의 일관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임금소득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누진적 성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이란 세율 인상과 각종 비과세 감면과 공제 규모를 줄이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

둘째, 부유층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0년 기준 종합소득 10억 초과 슈퍼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87%는 배당소득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1인당 1.7억에 달하는 배당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종합소득 5억 초과 6000여명의 배당소득은 1인당 8.1억에 달하며, 8000여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6.3억에 달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미국의 버핏처럼 소득세 최저한세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과 주식 현물시장에서 양도차익 과세 등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 ‘국민대통합’, ‘한국형 복지국가’ 등 요란한 구호를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선거용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취임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조한 미국 오바마와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선거용 구호로 머물지 않도록,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하루속히 내놓고 집행하기 바란다. 🇰🇷

2013년 새사연의 ‘추천 보고서’ 목록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2013년 3월 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추천 보고서	2/18	헬리콥터 머니: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2/21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김병권
추천 보고서	2/27	국제 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이은경
추천 보고서	3/4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여경훈